

# 주간 통일정세

2016-28

## Contents

###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7.9	北 '민족대회합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장에 김영철 임명(연합뉴스)
	7.11	선물 벽시계 차에 신고 홀로시찰...北, 김정은 사연 소개(연합뉴스)
	7.12	北 김정은, 잇단 민생행보...가죽공장 시찰(연합뉴스)
		北, 외교사절 대상 정세설명...인권제재·사드배치로 정세악화(연합뉴스)
		北, 전국 각지에 고아 대상 교육기관 설립(연합뉴스)
		北 당원 학습자료, 한조각 쇠붙이라도 나라 재부로 만들자(연합뉴스)
	7.13	北 '美 김정은 인권제재' 내부적으로 철저 통제(연합뉴스)
	北, 경제발전전략 이행 위해 "지하자원 확보 총력" 촉구(연합뉴스)	
7.14	北 김정은 또 건설사업 추진하나...건축설계소 시찰(연합뉴스)	
경제	7.11	北, 백두산 인근 '무봉국제관광특구' 투자기업에 특혜(연합뉴스)
	7.12	[단독]北, 해외식당 30여 곳 폐업...매상 올리려 탈법영업(연합뉴스)
	7.14	대북제재속 中 단둥 호시무역구 '정상가동' 기지개(연합뉴스)
	7.15	북·중·러 '3국 산업박람회' 中서 개막... 북한 40개사 참가(연합뉴스)
사회 문화	7.11	北 시장관리원, 간부 아내로 교체...주민들 분노(연합뉴스)
	7.12	개성공단 근로자, 건설돌격대로 평양 건설현장에 동원돼(연합뉴스)
외교 국방	7.9	北, 유엔에 또 서한...美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기여해야(연합뉴스)
		北, 사드배치 결정 다음날 SLBM 발사...공중폭발 추정(연합뉴스)
	7.10	北中 '혈맹관계' 수립 55주년...교류동향 포착 안 돼(연합뉴스)
		미·일, 北 SLBM 발사 한목소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연합뉴스)
		나토사령관 "北, 잇단 실험으로 미사일능력 발전...심각한 위협"(연합뉴스)
		EU, 한반도 핵무기 비확산 노력할 것...북핵 역할론 강조(연합뉴스)
		[단독]北 비무장지대 중화기 반입에 유엔사도 2년 전부터 맞대응(연합뉴스)
		러 전문가, 北 SLBM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 증명(연합뉴스)
	7.11	오바마, 임기 내에 북한과 핵 협상 가능성 크지 않아(연합뉴스)
		北, 북·미 뉴욕채널 완전차단 美에 통보...김정은 제재반발(연합뉴스)
中·北, 우호조약체결 55주년 맞아 축전 교환(연합뉴스)		
中, 北 SLBM 발사에 "대북 결의 전면 이행" 재차 강조(연합뉴스)		
	中다렌 박람회에 北대표단 200명 참가...제재 후 최대 규모(연합뉴스)	

	<p>[단독]北 공작원 800명 북중집경 건너와 활동...中당국 예의주시(연합뉴스)</p> <p>‘대북제재 이행감시 유엔 전문가패널 방한(연합뉴스)</p> <p>美전문가 “북, SLBM 전력화에 몇 년 필요...더 자주 시험할 것”(연합뉴스)</p>
7.12	<p>오바마 임기 내 북미관계 물 건너가...美우려속 최악대비 주장도(연합뉴스)</p> <p>美전문가 “北, 뉴욕채널 차단은 상징적 제스처”(연합뉴스)</p> <p>미국무부, 北 긴장고조 언행 삼가야...미국민 안전 최우선(연합뉴스)</p> <p>미국방부, 北 물리적 조치 위협에 “사드 배치 정당화해줘”(연합뉴스)</p> <p>북, 북-중 조약 55주년 행사 중국서도 열자...중, 묵묵부답(연합뉴스)</p> <p>中, 북중우호조약 시진핑-김정은 축전교환 공개꺼리는 이유(연합뉴스)</p> <p>방한 앞둔 스위스 대통령, 한국과 좋은 관계 심화할 완벽한 기회(연합뉴스)</p> <p>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활발한 활동...5차 핵실험 준비?(연합뉴스)</p>
7.13	<p>北, 美 김정은 제재에 “부시 정부도 안 한 행동”(연합뉴스)</p> <p>北, 이라크전쟁 책임 물어 “美, 전범국·인권유린국”(연합뉴스)</p> <p>美전문가, 北 7·6제안은 남북 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유사(연합뉴스)</p> <p>美전문가들 “北, 8월 한미훈련-11월 美 대선 때 기습도발 우려”(연합뉴스)</p>
7.14	<p>美하원 “北, 핵무기 13~21개 제조능력 갖춰”...北핵 결의안 상정(연합뉴스)</p> <p>美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광범위한 이행(연합뉴스)</p> <p>독일, 주북 北대사 후임 임명 동의 거부(자유아시아방송)</p> <p>美 전문가 “김정은, 잠수함미사일 개발 의지 강해”(연합뉴스)</p>
7.15	<p>美하원, ‘北 21개 핵무기 제조능력’ 결의안 의결(연합뉴스)</p> <p>러시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분량은 겨우 1쪽(연합뉴스)</p> <p>GMD로 북한 핵미사일 미 본토 공격 방어는 불가능(연합뉴스)</p>

## ■ 주간 동향

### 1. 정치

#### 가. 김정은 동향

2016. 7. 12.

##### ■ 北 김정은, 잇단 민생행보...가족공장 시찰(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안남도의 '평성합성가족공장'을 시찰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감.
- 김정은은 평성합성가족공장을 시찰한 자리에서 "이 공장은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나라의 보배공장으로 장성강화됐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이번 시찰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안정수 당 중앙위 부장, 박명순 당 중앙위 부부장이 동행함.

2016. 7. 14.

##### ■ 北 김정은 또 건설사업 추진하나...건축설계소 시찰(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의 대표적인 건축설계기관인 '백두산건축연구원'을 시찰 하며 경제 중시 행보를 이어감.
- 김정은은 백두산건축연구원을 시찰한 자리에서 "노동당 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건축물, 주체성·민족성·독창성·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함.

####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7. 9.

##### ■ 北, '민족대회합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장에 김영철 임명(연합뉴스)

-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민족대회합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을 일으켜나가기려는 온 겨레의 의지와 열망이 더욱 고조되는 속에 연석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별어지고 있다”며 “북, 남, 해외 제 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 연석회의 개최를 위한 북측준비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함.

- 로두철 내각부총리 등 14명이 연석회의 북측준비위 부위원장에게, 성(부처), 중앙기관, 근로단체 등 각 부문에서 선출된 50여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통신은 전함.

## 다. 공식행사

### ■ 특이사항 없음

##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7. 12.

### ■ 北, 외교사절 대상 정세설명…인권제재·사드배치로 정세악화(연합뉴스)

- 북한이 자국에 주재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사절을 초청해 미국의 대북 인권제재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 외무성이 최근 북한 주재 아시아 국가 외교대표들을 위한 정세통보모임을 조직했다”며 “모임에 라오스·캄보디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이란·인도·베트남 대사와 파키스탄 임시대리대사가 참가했다”고 보도함. 최희철 북한 외무성 아시아·오세안주총국장장은 “미국이 7월 6일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무성 보고서와 그에 따르는 재무성 특별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하면서 감히 우리 최고 수뇌부를 걸고든 것은 최악의 적대 행위”라며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로 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최 국장은 “미국이 이번 제재조치를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조미(북미) 사이의 모든 외교적 접촉공간과 통로가 즉시 차단되고 미국의 적대 행위를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초강경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성명하였다”고 덧붙였다.
- 아울러 최 국장은 “우리와 주변 나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남조선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는 등 조선반도 정세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그는 “모든 아시아 나라들이 이에 각성 있게 대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과 주범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알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해를 주는 행동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 北, 전국 각지에 고아 대상 교육기관 설립(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들어 전국 각지에 고아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충정의 200일 전투에 떨쳐나선 평안북도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만리마속도창조 운동의 불길 높이 (고아 대상 교육기관인) 신의주 초등학교, 중등학교 건설을 다그치고 있다”고 보도함.
- 대외선전용 매체 ‘조선의오늘’은 지난 2일 남포시에 초·중등학교 건설이 추진 중이라며 “양지바른 산기슭 근 5만㎡ 부지에 두 개의 교사와 기숙사, 다기능 체육관, 야외수영장, 식당, 잔디밭 운동장 등이 건설된다”고 선전함.
- 북한의 이러한 모습은 김정은의 ‘어린이 사랑’을 부각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 北 당원 학습자료, 한조각 쇠붙이라도 나라 재부로 만들자(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되자 주민들에게 ‘절약투쟁’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연합뉴스가 12일 입수한 북한 내부 학습자료(지도안) ‘당의 방침에 대하여(1)’는 “아무리 많이 생산하여도 량비가 많으면 밀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며 “만리마를 타고 전진해나가는 절약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밝힘.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북중 수출무역의 타격으로 외화유입이 줄어들면서 공급 감소에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당원은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직책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절약투쟁에서 앞장설 수 있게 요구하는 것이고 근로자들은 생산노동에서 자재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이 진행된다’고 설명함.

2016. 7. 13.

### ■ 北, ‘美 김정은 인권제재’ 내부적으로 철저 통제(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
- 지난 10일 북-미 뉴욕 접촉 채널의 완전 차단을 미국에 통지했다는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한 이후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서는 관련 보도를 일절 하지 않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주요 내부 매체들은 13일 오전까지 김정은이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다루지 않음.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권 문제로 제재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지도자’의 정통성과 위상에 흠결이 될 수밖에 없어서 내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北, 경제발전전략 이행 위해 “지하자원 확보 총력” 촉구(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이행을 위해 지하자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독려함.
-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세계의 광물표본실로 불리우는 내 나라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200일 전투에 떨쳐나선 당원·근로자 앞에는 지하자원을 종합적으로 효과 있게 개발 이용해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해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나르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다만 “감독통제기관 일꾼들은 금강산, 묘향산에 아무리 지하자원이 많다고 해도 개발하지 말고 아름다운 풍치와 자연을 후대에게 물려주자고 하시던 수령님들의 간곡한 당부를 심장 깊이 새겨야 한다”며 관광지 환경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함.

##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7. 11.

■ **선물 벽시계 차에 싣고 홀로시찰…北, 김정은 사연 소개(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1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나 홀로’ 시찰 일화를 전하며 그의 ‘주민 사랑’을 부각하는 데 애를 씀.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찾아오시여리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이 지난 2013년 평양 문수물놀이장 건설 현장을 시찰한 사연을 소개함.
- 노동신문의 이런 보도는 북한이 올해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잇따른 속도전으로 주민 불만이 팽배하자 김정은의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해 충성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2. 경제

###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나. 주요조치

2016. 7. 11.

### ■ 北, 백두산 인근 '무봉국제관광특구' 투자기업에 특혜(연합뉴스)

- 북한이 백두산 인근의 무봉국제관광특구 개발투자 기업에 특혜를 주는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경제개발협회 계성남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공화국(북한) 정부는 무봉국제관광특구에서 하부구조건설에 투자하거나 첨단기술제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관광상품을 생산하려는 기업가들에게는 토지임대료와 기업소득세를 낮추어주는 등 특혜를 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어 “특구 내에서 공화국의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외국기업가들은 단독으로도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여러 외국기업가들이 전망이 좋은 무봉국제관광특구개발사업에 참가할 의향을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양강도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 일부 지역을 무봉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함. 이곳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이은 북한의 두 번째 국제관광특구임.

## 다. 경제 상황

### ■ 특이사항 없음

##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7. 12.

### ■ [단독]北, 해외식당 30여 곳 폐업...매상 올리려 탈법영업(연합뉴스)

-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운영하는 해외식당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30곳이 넘게 폐업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식당도 손님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앞으로 폐업 식당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대북제재 이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운영되던 북한식당은 100여 곳으로 추정됐다”면서 “(지난 3월초)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휴업이나 폐업한 해외 북한식당은 3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 탈북 이후 식당 지배인과 종업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는 한층 강화됨. 러시아 내 북한식당 지배인은 정기적으로 주러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종업원과 방문객 동향을 보고하고 있고, 최근 주몽골 북한대사관은 주재국



내 북한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20여명을 소집해 “(종업원 집단 탈북은) 남조선이 국회의원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허위로 날조한 것”이라는 사상교육을 한 것으로 전해짐.

2016. 7. 14.

■ **대북제재속 中 단둥 호시무역구 ‘정상가동’ 기지개(연합뉴스)**

-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도 동참한 가운데 북중 국경의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소재 호시무역구가 개장 9개월 만에 정상가동 조짐을 보인다고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이 14일 보도함.
- 이 매체는 단둥 호시무역구가 개장하고도 그동안 북중 간에 거래가 거의 없었으나, 지난달 말부터 단둥 신개발지의 ‘중조(中朝·북한과 중국)변민 호시무역구’가 통관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달 초부터 소량의 북한 상품이 통관을 거쳐 중국에 반입됐다고 전함.
- 중국신문망은 “조선(북한)상품이 무역구를 통과한 것은 양측 간 무역거래가 성사단계에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함. 중국 측은 단둥소재 호시무역구 개장에 전시장·물류창고 등 교역기반시설을 건설하는 10억 위안(약 1천829억 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아 점포 입점률이 60%대에 그침.

2016. 7. 15.

■ **북·중·러 ‘3국 산업박람회’ 中서 개막… 북한 40개사 참가(연합뉴스)**

-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3개국이 참가하는 산업 박람회가 15일 개막함.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참가국들이 각각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임.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에는 북한기업 40개와 북한대표단 200여 명이 참가함.
- 북한기업의 참가부문은 경공업, 농산품, 약기, 예술품, 생물프로젝트, 방직, 의류가공, 의료기기, 식품가공 등임.

### 3. 사회문화

####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7. 12.

■ **개성공단 근로자, 건설돌격대로 평양 건설현장에 동원돼(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여성 근로자들을 '건설돌격대'에 배치해 평양시 건설현장에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1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북 소식통을 인용, “개성공단에 종사하던 청년 근로자 대부분이 건설돌격대에 편입돼 현재 평양에서 진행 중인 ‘려명거리’ 공사에 동원됐다”고 밝힘.
- 김 대표는 “건설돌격대의 숙소라 해야 비닐하우스로 된 천막에서 옥수수밥을 먹으며 외출 한 번 제대로 못 하고 건설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 모두가 이전에 근무했던 개성공단 시절을 그리워하며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함. 이어 그는 “이들은 모여 앉으면 지난날 근무했던 개성공단을 떠올리며 남조선(한국) 기업과 상품, 초코파이와 봉지 커피(혼합 커피)가 먹고 싶어 한다”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들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개성공단에서 쫓겨나고 건설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게 된 것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들을 건설현장으로 배치한 당국을 향한 원망과 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임.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7. 11.

■ **北 시장관리원, 간부 아내로 교체…주민들 분노(연합뉴스)**

- 최근 북한 당국이 장마당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배치된 관리원들을 모두 힘 있는 간부의 아내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시장관리원들은 각 지방, 구역 인민위원회에서 선발하는데 대체로 힘 있는 간부의 아내들”이라며 “남편의 권세로 장마당 통제권까지 얻은 이들의

위세와 횡포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함.

- 이어 소식통은 “오죽하면 상인들 속에서 ‘정복을 입은 보안원보다 무서운 게 시장관리원들’이라는 말이 나오겠느냐”며 “중앙에서 (불법) 골목시장을 없애라고 강력히 지시하지 만, 장마당 관리원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상인들이 골목시장으로 몰리고 있다”고 덧붙임.

#### 4. 외교국방

##### 가. 북·미 관계

2016. 7. 11.

###### ■ 오바마, 임기 내에 북한과 핵 협상 가능성 크지 않아(연합뉴스)

- 미국의 일간신문 뉴욕타임스(NYT)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에 북한과의 핵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봄.
- NYT는 10일(현지시간) ‘제재가 북한을 움직일 것인가’(Can Sanctions Make North Korea Budge?)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새로 가한 제재의 효과를 짚음.
- 미국은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림.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됐고 이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됨.

###### ■ 北, 북·미 뉴욕채널 완전차단 美에 통보…김정은 제재반발(연합뉴스)

- 북한이 현재 유일하게 유지해온 북·미 뉴욕채널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미국 정부에 통보함.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우리의 즉시적인 제재조치 철회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그에 대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나가게 된다”면서 “첫 단계로서 조미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하여온 공식접촉통로인 뉴욕 조미접촉 통로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을 통지하였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10일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부를 통해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함. 북한의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처음 제재대상에 올린 것에 대한 반발로 보임.

2016. 7. 12.

■ **오바마 입기 내 북미관계 물 건너가·美우려속 최악대비 주장도(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 미국이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처음으로 인권제재 대상으로 삼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조기에 확정하면서 대북 압박의 고삐를 비짝 죄고 있고, 이에 맞서 북한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잇단 조치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양국 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해 온 접촉통로인 '뉴욕 채널'을 완전히 차단함.
- 양측이 '강 대 강 대결구도로 나서면서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모양새임. 물론 미 정부는 인권제재와 대화는 별개라며 여전히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로 볼 때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은 형국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6개월가량 남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입기 내 북미대화 복원, 6자회담 재개 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옴.

■ **美전문가 “北, 뉴욕채널 차단은 상징적 제스처”(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 정부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린 것에 반발, 뉴욕 북미접촉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주장이 나옴.
- 미첼 리스 미 국무부 전 정책기획실장은 12일 북한의 이번 발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며 “뉴욕주재 북한대표부의 외교관을 철수시키지 않는 한 ‘뉴욕채널’은 그대로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그는 “북한의 이번 발표는 미국 측에 실망감을 표출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美국무부, 北 긴장고조 언행 삼가야·미국민 안전 최우선(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북미 간 유일한 접촉창구인 뉴욕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고 억류 중인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도발적 언행을 삼가라고 경고함.
-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밝힘. 그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발언들 가운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전을 증대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북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이나 발언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함.
- 특히 북한의 억류 미국인 전시법 처리 주장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민에 대해 적절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구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북한은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함. “국외에 거주하는 미국민의 안녕과 안전은 미 국무부의 최우선 사안”이라며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미국방부, 北 물리적 조치 위협에 “사드 배치 정당화해줘”(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물리적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한미동맹의 사드 배치 결정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교전(도발) 행위를 일삼고, 또 탄도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추진해 한미동맹이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함.
-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으며, 북한은 사흘 만인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를 통해 “세계 제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경고함.

2016. 7. 13.

■ **北, 美 김정은 제재에 “부시 정부도 안 한 행동”(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린 것에 대해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사 정남혁은 이날 ‘미국의 무분별한 제재 책동은 파국적 후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부시 2세 행정부조차도 우리의 운명의 전부인 최고존엄을 직접 겨냥해 미국 국내법을 발동하는 상식 밖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논평은 또 “조선반도 정세와 조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진행될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정세폭발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며 오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 무력 도발을 벌일 수 있음을 시사함.

■ **北, 이라크전쟁 책임 물어 “美, 전범국·인권유린국”(연합뉴스)**

- 북한이 이라크전쟁의 부당성을 밝힌 보고서가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전범국, 인권유린국”이라고 비난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영국이 ‘대량살륙무기(WMD) 위협’이라는 미국의 날조에 따라 일어난 이라크전쟁의 비법성을 공식인정한 것”이라며 “미국이야말로 국가테러(테러)와 인권유린, 세계를 휩쓰는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자주권 침해 행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며 “인권문제를

- 운운하며 우리(북한)의 최고 존엄까지 걸고 드는 무엄하기 그지없는 망동을 부린 것은 천추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중의 대죄악으로, 특대형 범죄”라고 억지를 부림.
-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전쟁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감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대미문의 악랄한 적대 행위와 새 전쟁 도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 **美전문가, 北 7·6제안은 남북 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유사(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6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한 ‘정부 대변인 성명’은 북한이 한동안 암시해오기만 했던 ‘비핵화 대화용의’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로버트 칼린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이 주장함.
-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들고 나온 ‘비핵화’ 대화 개념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를 조건으로 한 북미 평화협정 등을 다룬 6자회담에서 2005년 나온 9.19 공동성명이 아니라 지난 1992년 1월 발표된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유사하다고 그는 분석함.
- 칼린은 북한의 7.6 제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가 가리앉은 후 되살아날지는 알 수 없다면 서도 “북한이 어떤 새로운 근본적인 정책 입장을 내놓은 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나중에 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함.

2016. 7. 14.

■ **美하원 “北, 핵무기 13~21개 제조능력 갖춰”…北핵 결의안 상정(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이 최대 21개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위협과 핵확산 그리고 인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H.Res.634)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함.
-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등 계속된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음.

■ **美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광범위한 이행(연합뉴스)**

-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등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이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지난 5월 31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다고 14일 보도함. 19쪽 분량

- 보고서에는 안보리 결의가 명시한 북한과 관련된 불법 무기 거래와 해운·항공 운송, 수출통제, 대외교역, 외교관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의 각종 제재 노력이 제시됨.
- 보고서는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연방항공청, 해양경비대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충실한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며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강조함.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현재까지 한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3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2016. 7. 15.

■ **美하원, ‘北 21개 핵무기 제조능력’ 결의안 의결(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이 최대 21개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결의안(H.Res.634)을 통과시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위협과 핵확산에 대응하고 역내 안정과 인권 수호를 위해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의결함.
- 현재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VOA는 덧붙임.

나. 북·중 관계

2016. 7. 10.

■ **北中 ‘혈맹관계’ 수립 55주년…교류동향 포착 안 돼(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11일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약칭 북중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지만 아직 양측의 구체적인 교류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음.
- 북수의 대북 소식통은 10일 “북중 간의 고위급 교류 동향은 물론 관영 언론들의 관련 보도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함. 북중 조약은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가 1961년 7월11일 베이징에서 체결해 그해 9월 10일 발효시켰다. ‘전쟁 자동개입 조항이 핵심임.
- 중국 내에서는 한미의 ‘사드’(THAAD·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계기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북중 관계 복원 여부는 당분간 베이징 외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임.

2016. 7. 11.

■ **中-北, 우호조약체결 55주년 맞아 축전 교환(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11일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약칭 북중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중국과 북한이 축전을 교환했다고 밝힘.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조약체결 55주년을 기념하는 활동이나 북중 고위층 간의 상호방문 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중조(중국과 북한) 쌍방은 이미 상호축전(발송) 방식으로 (조약체결 55주년을) 기념했다”고 대답함.
- 중앙통신은 또 시 주석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중국 측은 조선 측 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조를 촉진시키며 중조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中, 北 SLBM 발사에 “대북 결의 전면 이행” 재차 강조(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북한이 최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대해 관련 국가들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한층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11일 밝힘.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관련 질문에 “현재 반도(한반도)는 매우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함.
- 또 중국은 모든 관련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中다론편 박람회 北대표단 200명 참가…제재 후 최대 규모(연합뉴스)**

- 15일부터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론편(大連)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에 200명 규모의 북한 대표단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복수의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이는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조치를 시행한 후 북중 간 경제교류로는 최대 규모라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소식통은 “중국이 유엔제재 대상 이외의 분야에서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함.
- 1인당 350위안(약 6만원)인 관광상품에는 1회당 1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짐.

■ **(단독)北 공무원 800명 북중접경 건너와 활동…中당국 예의주시(연합뉴스)**

- 북한 공무원 800여 명이 최근 북중접경의 중국 지역에 건너와서 활동해 중국 정보당국이 이들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짐.
- 1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초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귀환 직후 북한의 공작조 800여 명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단둥, 옌지(延吉) 등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임. 한 국가보위부 및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들은 압록강을 건너 단둥에 300여 명, 두만강 건너 옌지, 훈춘(琿春), 투먼(圖們) 등 연변자치주에 500명 정도가 넘어옴.

- 라오닝성 단둥의 한 소식통은 “최근 들어 낯선 북한 무역일꾼, 북한사람이 주변에 많이 보인다”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요원이라는게 지역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함.

## 2016. 7. 12.

### ■ 북, 북중 조약 55주년 행사 중국서도 열자·중, 묵묵부답(연합뉴스)

- 북한은 ‘북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약칭 북중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중국에서도 기념행사를 개최하자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북중 관계에 정통한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함.
- 소식통은 북한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오닝(遼寧) 성 정부에 북중 조약 55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측도)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함.
- 5년 전인 북중 조약 체결 50주년에는 북한이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중국에, 중국은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인 장더장(張德江) 당시 부총리 겸 정치국 위원을 북한에 각각 파견하고 베이징(北京)과 평양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진행했었음. 그러나 올해는 꺾어지는 해인 55주년인데도 축전만 주고받은 채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 中, 북중우호조약 시진핑-김정은 축전교환 공개꺼리는 이유(연합뉴스)

- 중국이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약칭 북중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 축전을 교환하고도, 이를 드러내놓고 공개하는 북한과 달리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 모드’로 일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림.
- 북한이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두 지도자의 축전 교환 사실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과는 달리 12일 되어서도 중국 관영 언론 매체들도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의 루강(陸慷)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조 쌍방은 이미 상호축전(발송) 방식으로 (조약체결 55주년을) 기념했다”고 대답함. 그런데도 중국 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봐도, 그와 관련된 중국어 기사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중국어판 보도를 그대로 전제한 것 외에는 찾을 수 없음.

- 아사히(朝日)신문도 12일 북한이 북중 조약체결 55주년 기념행사를 중국에서도 개최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중국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짜증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 다. 북·일 관계

2016. 7. 10.

### ■ 마·일, 北 SLBM 발사 한목소리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연합뉴스)

- 북한이 9일 함경남도 신포 동남방 해상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과 일본이 한목소리로 규탄함.
-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사일 발사를 “단호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국제사회와 확실하게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이 전함.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일본의 안보에는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뜻도 밝힘.
-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이 미사일이 북미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략사령부는 설명함.

## 라. 북·러 관계

2016. 7. 15.

### ■ 러시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공개...분량은 겨우 1쪽(연합뉴스)

-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분량이 1쪽에 불과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 외신이 15일 보도함.
- VOA는 이날 유엔이 러시아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면서 “보고서를 소개하는 문구를 제외하면 실제 조치 사항은 단 세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전함.
-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결의 채택 90일 이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현재까지 한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3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7. 9.

■ **北, 유엔에 또 서한…美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기여해야(연합뉴스)**

-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지난 8일 유엔 사무부총장에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도록 유엔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편지는 “유엔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통일문제와 관련한 1975년 제30차 총회결의와 2000년 제55차 총회결의 그리고 2007년 제62차 총회결의를 각각 채택한 바 있다”며 “그 결의들에는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외국 무력을 철수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문제 그리고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이행할 데 대한 문제 등 중요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있다”고 언급함.
- 편지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시키고 조선의 북과 남 그리고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유엔총회결의들이 이행되도록 하는데 유엔사무국이 적극 기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함.

2016. 7. 10.

■ **나토사령관 “北, 잇단 실험으로 미사일능력 발전…심각한 위협”(연합뉴스)**

- 유럽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커티스 스키퍼로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합군 사령관 겸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사일능력을 발전시켜왔으며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함.
-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스키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국에 배치키로 한 것과 관련해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북한의 잠재적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언론들이 전함.
- 스키퍼로티 사령관은 “지금 북한은 사정거리가 지역 내에 그치는 무수단 계열 미사일로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잇단 실험을 통해) 감정은이 배운 것은 그 미사일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능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북한의 미사일능력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함.

■ **EU, 한반도 핵무기 비확산 노력할 것…북핵 역할론 강조(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향후 EU의 글로벌 전략과 관련, 한국과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문제에 관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함.
- 특히 EU는 한반도의 핵무기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강조함. EU 집행위는 지난달 하순 유럽의회(EP)에 제출한 ‘EU의 외교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전략 보고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됨.

- EU가 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역할 확대를 내세우면서 한국의 안보 문제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들 이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관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 **[단독]北 비무장지대 중화기 반입에 유엔사도 2년 전부터 맞대응(연합뉴스)**

-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중화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규정을 어기고 박격포, 고사총 등을 배치하자 유엔군사령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전협정 체결 61년 만인 2014년 9월부터 DMZ에 여러 종류의 중화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이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공식 확인됨.
- 이에 따라 정전협정을 통해 남북한 무력의 완충지대로 설정한 DMZ가 더는 비무장지대가 아닌 '무장지대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옴.
- 국방 당국 관계자는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군이 DMZ에 중화기를 반입하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북한군의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함.
- 유엔사 관계자는 “중화기 반입은 정전협정의 현행 예외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간의 기록 각서(2014년 7월 17일)에 의한 것”이라고 말함. 이는 유엔사가 2년 전 합참과 DMZ 중화기 반입 문제를 협의하고 규정을 개정했음을 말해줌.

2016. 7. 11.

■ **'대북제재 이행감사' 유엔 전문가패널 방한(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일부가 이번 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알려짐.
-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4~5명이 11일부터 방한해 정부와 제재 이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이날 밝힘. 전문가 패널들은 15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외교부 등 정부 당국자들과 국내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날 것으로 전해짐.
-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전문가 각 1명씩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음.

2016. 7. 12.

■ **방한 앞둔 스위스 대통령, 한국과 좋은 관계 심화할 완벽한 기회(연합뉴스)**

- 요한 슈나이더 암만 스위스 대통령은 1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의 스위스 내 비자금 은닉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지도자나 다른 고위 관리들에 의한 그런(비자금 은닉) 활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indication)가 있으면 관련 행정적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오는 13~14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는 슈나이더 암만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가진 단독 서면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 관리들이 스위스 내 은행에 비자금을 은닉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대한 스위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스위스 정부는 추측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함.
- 슈나이더 암만 대통령은 스위스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나 다른 금지된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자금과 경제적 자산이 차단(동결)되고, 이는 북한 정부나 노동당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자금이나 금융자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함.

## 2016. 7. 14.

### ■ 독일, 주독 北대사 후임 임명 동의 거부(자유아시아방송)

- 독일 정부가 북한이 주(駐)독일 북한대사 후임으로 요청한 신임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야그레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 이 방송은 “북한이 리시홍 주독일 북한대사 후임으로 요청한 신임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야그레망을 독일 정부가 최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 때문에 교체돼 평양으로 돌아갔던 리 대사가 공여지책으로 부랴부랴 베를린으로 되돌아와 대사 업무를 수행 중인 걸로 확인됐다”고 밝힘.
- 이 방송은 “북한식 ‘외교참사’로 기록될 이번 사태는 문책성 경질로 평양으로 불러들인 대사를 공여지책으로 다시 내보내야 할 만큼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외교관을 찾기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임.

## 바. 군사 및 핵·미사일

### 2016. 7. 9.

#### ■ 北, 사드배치 결정 다음날 SLBM 발사·공중폭발 추정(연합뉴스)

- 북한이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다음 날인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함.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11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이어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는 잠수함 사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초기비행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 합참은 “북한은 무수단 시험발사에 이어 오늘 SLBM 시험발사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함.

2016. 7. 10.

■ **러 전문가, 北 SLBM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 증명(연합뉴스)**

-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는 데 대해 당장 자국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계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함.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블라디미르 코모예도프는 9일(현지시간) 북한의 잦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러시아에 직접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힘.
- 북한은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다음 날인 9일 오전 11시 30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남쪽 해상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임.

2016. 7. 11.

■ **美전문가 “북, SLBM 전력화에 몇 년 필요…더 자주 시험할 것”(연합뉴스)**

- 북한이 다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에 나섰다 할 성과를 못 낸데 대해 북한이 여전히 SLBM 개발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앞으로 더 자주 시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함.
-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기고문을 통해 “빈번한 미사일 시험에도 북한은 여전히 중대한 기술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의견을 냄.
- 실링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이 최근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에 박차를 가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그 체계(무수단)에 국한되지 않으며, 앞으로 더 자주 SLBM 발사 시험이 이뤄지고 그에 따라 실패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봄.

2016. 7. 12.

### ■ 38노스, 北 풍계리 핵실험장서 활발한 활동..5차 핵실험 준비?(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 가운데 북쪽 입구 부근에서 최근 자재나 차량으로 보이는 물체가 출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밝힘
-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11일(이하 현지시간)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입구 위성사진에 자재나 비품으로 보이는 물체들은 물론 소형 차량과 광산용 운반차량이 나타났다고 설명함.
- 버뮤데스는 "(지난 7일) 사진만으로는 이 활동이 (기존 갱도의) 유지보수나 (새로운 갱도) 굴착을 위한 것인지, 혹은 제5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장래에 (북한) 정권의 지시가 내려졌을 때 즉시 (핵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풀이함.
- 버뮤데스 연구원은 지난 4월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북한이 느리지만 꾸준히 핵실험을 준비한 뒤 전격적으로 감행할 것이라고 내다봄. 이날 발표한 위성사진 분석에서 버뮤데스 연구원은 서쪽 입구 주변에서도 "제한적인 활동"이 포착됐지만 "해빙과 강우 등에 따른" 구조물 보수 작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주 지원단지와 남쪽 입구 주변에서는 활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6. 7. 13.

### ■ 美전문가들 “北, 8월 한미훈련-11월 美 대선 때 기습도발 우려”(연합뉴스)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과 11월 미국 대선을 즈음해 기습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 미국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첫 인권제재에 대한 반발로 북미 간 유일한 접촉창구인 뉴욕채널까지 완전히 차단한 북한이 이 시기에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것임.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먼저 “뉴욕채널은 (제1차 북핵위기가 고조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제네바 협상 중간 중간에도 뉴욕채널을 통해 대화가 오갔다”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6자회담 기간에도 종종 가동됐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역류 미국인 인질 문제를 푸는데 주로 활용됐다”며 뉴욕채널의 역할을 강조함.
- 북한리더십 전문가인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 박사도 연합뉴스에 “북한이 뉴욕채널을 끊은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과 어떤 것을 논의할 기분이 아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를 한 지금의 미국 행정부와는 중요한 이슈에 관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함.

2016. 7. 14.

■ **美 전문가 “김정은, 잠수함미사일 개발 의지 강해”(연합뉴스)**

-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활동에서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SLBM 개발 의지가 강함을 엿볼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이 지적함.
- 미 정보분석업체 ‘올소스 애널리시스’에서 활동하는 버뮤데스 연구원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SLBM 시험이 공개된 것만 지금까지 11회에 달한다며 “김정은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 그리고 실제로 (SLBM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함.
-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조지프 디토머스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는 최근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등을 새로 제재한데 대해 즉각적인 충격을 주기보다 인권침해 같은 비인도적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주려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석함.

2016. 7. 15.

■ **GMD로 북한 핵미사일 미 본토 공격 방어는 불가능(연합뉴스)**

-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인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GMD)로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옴.
-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단체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UCS)은 현재의 GMD로 미 주요 도시들에 대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없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포대 확대배치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5일에 발표할 계획임.
- 요격 미사일 분야의 전문가인 세명의 물리학자가 참가해 펴낸 6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GMD가 기술적으로 여러 문제를 드러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배치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함.



## II 동북아정세

### 1. 한반도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7.12	한미, 괌 사드기지 언론에 공개...대국민 설득작업 나섰다(연합뉴스)	
	7.14		美CIA 국장, 사드 배치는 美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연합뉴스)
	7.15	한미일 "사드, 제3국 겨냥 아냐"...북핵공조·남중국해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7.9		<사드배치 결정> 中왕이, 어떤 변명도 무기력...韓친구들 냉정하길(연합뉴스)
	7.13	김영우 "中, 사드 이해해야...북핵 사라지면 불필요"(연합뉴스)	<사드배치> 中, 프로세스 중단 촉구...필요한 조치 취할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7.14	이준규 주일대사, 한일사이 단순 메신저 아닌 촉진자 되겠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7.9		<사드배치 결정> 러시아, 아태지역 전략적 균형 훼손...심각히 우려(연합뉴스)
			러시아, 사드배치 심각 우려...韓, 양국 관계 영향 없어(연합뉴스)

## 2. 주변국정세

###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7.9		<사드배치 결정> 中 언론 잇단 비판·남중국해도 거론하며 미국 비난(연합뉴스)
	7.13	美백악관, 중국 부상 두렵지 않아·남중국해 눈 감는 일 없어(연합뉴스)	주미 中대사, 남중국해 판결 거부·미국이 항행자유 저해(연합뉴스) 中, 중재판결 준수 촉구한 美에 “도발 중단하라”(연합뉴스)
		‘남중국해 판결’ 美전문가들, 강제력 약하나 中에 상당한 압력(연합뉴스)	
		美언론, 中이 국제심판 받은 건 처음·굴욕 분노 美향하나(연합뉴스)	
		남중국해 판결 이후 미·중 군사력 대치 첨예(연합뉴스)	
7.14	백악관 “국제법규 지켜야·남중국해 해로 보호” 中 재차 압박(연합뉴스)		
	성김 “필리핀, 남중국해 자국 해역 더 잘 감시하도록 지원”(연합뉴스)		
	남중국해 갈등 ‘속도조절’...美·아세안 ‘물밑’ 중재 나섰나(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7.9	美 러 외교관 2명 추방·미 외교관-러 경찰 몸싸움 대응 조치(연합뉴스)	
	7.10		美 러, 외교관 맞추방·‘외교관-경찰관 몸싸움 이후 신경전(연합뉴스)
	7.14		외교관 추방 신경전 속 러시아, 미국 방 송위원장 입국불허(연합뉴스)

			러, 美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세 주사...관련국과 협의 준비(연합뉴스)
	7.15	美러, 시리아서 IS격퇴 군사협력 모색...백악관, 확실한것 아냐(연합뉴스) 푸틴, 방러 케리와 면담...시리아-우크라 문제 등 논의(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b>일본</b>
중일 관계	7.11	中, 日 선거결과에 '축각'...전쟁에 한걸음 더 다가서(연합뉴스) 中, 日 선거결과에 "역사 교훈 새겨 평화의 길 걸어야"(연합뉴스)	
	7.12		日외무상,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단 구속력 있다(연합뉴스) 요미우리, 아셈 활용해 몽골서 중일 정상회담 추진(연합뉴스)
	7.13	中, 일본의 남중국해 판결 옹호에 '침략국' 비난(연합뉴스)	정당한 사법절차 결과...日언론, 남중국해 판결수용 촉구(연합뉴스)
	7.14		日집권당, 우리도 중국 제소하자...동중국해 가스전 시비(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중국</b>
중러 관계	7.10	중러, 사드 대응한 컴퓨터 군사훈련 첫 실시(연합뉴스)	
<b>분류</b>	<b>일자</b>	<b>일본</b>	<b>러시아</b>
일러 관계			

## ■ 주간 동향

### 1. 한반도정세

#### 가. 한·미 관계

2016. 7. 12.

##### ■ 한미, 괌 사드기지 언론에 공개…대국민 설득작업 나섰다(연합뉴스)

- 주한미군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작업에 착수함.
-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다음 주 초 국내 언론사 취재진이 태평양 괌 미군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를 견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국방부는 보안시설인 괌 사드 포대를 한국 언론에 공개하도록 미군 측의 협조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가 제작한 카드뉴스는 “(사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함.

2016. 7. 14.

##### ■ 美CIA 국장, 사드 배치는 美 동맹국들에 대한 의무(연합뉴스)

-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13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이는 “미국의 의무”라고 옹호함.
- 13일(현지시간) 경제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브레넌 국장은 전날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대두하는 안보 위협’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확실한 의무가 있다”며 “미국이 지역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사드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함.
- 그는 “김정은이 핵무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지역과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다”고 비난함.

2016. 7. 15.

##### ■ 한미일 “사드, 제3국 겨냥 아냐”…북핵공조·남중국해 논의(연합뉴스)

- 한미일은 14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4차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정세와 대북공조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 이날 협의에서는 한미가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최근 국제 중재재판이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짐.

- 우리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참석함.
- 외교부는 15일 이번 협의에 대해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대북제재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 달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함.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지속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나. 한·중 관계

2016. 7. 9.

### ■〈사드배치 결정〉 中왕이, 어떤 변명도 무기력·韓친구들 냉정하길(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9일 한미 양국이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그 어떤 변명도 무기력하다”며 반발함.
- 중국 외교부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스키랑카 콜롬보를 방문 중인 왕 부장은 현지에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반도(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또 중국이 “(사드배치) 배후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완전히 일리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불안전을 발판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말고, 이른바 안전 위협을 구실로 다른 국가의 정당한 안전이익을 위협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함.
- 한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국 친구들이 사드 배치가 진정으로 한국의 안전 반도의 평화인정 실현 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2016. 7. 13.

### ■김영우 “中, 사드 이해해야·북핵 사라지면 불필요”(연합뉴스)

-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3일 중국이 미국의 한국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진다면 사드도 배치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자제를 주문함.
- 새누리당 소속인 김 국방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국은 더 침착해져야 한다. 중국의 이해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힘.

- 이어 “중국은 오랜 세월 아주 막대한 군비를 쏟아 부으며 전력을 증강해왔다. 아마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주한 미군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에 기초해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강조함.

■ <사드배치> 中, 프로세스 중단 촉구…필요한 조치 취할 것(연합뉴스)

- 중국은 13일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프로세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사드배치 지역을 발표함.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자신의 합리적 이익을 위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또 “사드 배치는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국가들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반도(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함.

#### 다. 한·일 관계

2016. 7. 14.

■ 이준규 주일대사, 한일사이 단순 메신저 아닌 촉진자 되겠다(연합뉴스)

- 이준규 신임 주일대사는 1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힘.
- 이 대사는 이날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취임 인사차 기시다 외무상과 면담한 자리에서 “한일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긴밀한 관계도 있지만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일 사이에 단순한 전달자나 다리의 역할이 아니라 양국 간에 ‘일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말함.
- 이 대사는 이어 “이런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 국민들에게 친구로서 받아들여지고,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로부터 사랑받는 대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시다 외무상의 협조를 요청함.

#### 라. 한·러 관계

2016. 7. 9.

■ <사드배치 결정> 러시아, 아태지역 전략적 균형 훼손...심각히 우려(연합뉴스)

- 러시아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의 결정에 즉각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섬.
- 러시아 외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가 나온 직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의 단호하고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 행보는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힘.
-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체프도 “한국 지도부의 위험한 행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면서 “정치적 부문에서는 물론 군사 분야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함.

■ 러시아, 사드배치 심각 우려...韓, 양국관계 영향 없어야(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한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한러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러시아 측에 밝힘.
-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제16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 김 차관보는 러시아가 반대하는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정당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강조함.
- 러시아 외무부는 우리 정부보다 먼저 발표한 회담 보도문에서 “미국 MD(미사일방어) 시스템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관한 양국의 공표와 관련 러시아 측의 아주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음을 분명히 함. 또 “러시아는 이 행보를 미국 글로벌 MD의 아태지역 섹터 전력 증대와 아태지역 및 역외 지역의 기존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힘.

## 2. 주변국정세

### 가. 미·중 관계

2016. 7. 9.

■ <사드배치 결정> 中언론 잇단 비판...남중국해도 거론하며 미국 비난(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중국 관영 인민일보 9일 “덕에 의지하면 성하고 힘에 의지하면 망한다”는 역사의 법칙을 잊지

말리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함.

- 인민일보는 이날 사실에서 한미 양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가의 명확한 반대에 이렇듯없이 사드 배치를 선포했다며 이같이 비난함. 신문은 동시에 미국은 미사일 구축함을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와 난사군도(南沙群島)에 몰래 접근시키고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전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킴으로써 미국이 아시아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함.
-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8일 사실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국의 정부기관과 기업, 정치인을 제재하라고 촉구함. 환구시보는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안전을 훼손한다”며 “한국은 사드를 컨트롤할 수 없고 사드를 제한적으로 운용한다는 선언은 값싼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 또 미국을 거론하며 “조선(북한)의 핵문제는 반도(한반도) 상황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조선의 핵보유에는 평양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층적인 원인이 있었다”며 일종의 동정을 표하기도 함.

2016. 7. 13.

■ **美백악관, 중국 부상 두렵지 않아…남중국해 눈 감는 일 없어(연합뉴스)**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은 12일(현지 시간) 남중국해와 관련해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눈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크리튼브링크 선임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함.
- 또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판결은(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에 중요한 외교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함. 이 관계자는 특히 오는 26일부터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만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주미 중대사, 남중국해 판결 거부…미국이 항행자유 저해(연합뉴스)**

- 네덜란드 소재 국제분쟁중재기구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12일(이하 현지시간)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추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미 정책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판결이 PCA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고 “선의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함.
- 분쟁 대상 중 한 곳인 스카보로 암초(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중국과 필리핀 모두 오래 어업을 한 역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겠냐는 질문에 추이 대사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답한 뒤 “당초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문제였지만 베트남도 개입됐고 법적 문제 때문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함.

#### ■ 中, 중재판결 준수 촉구한 美에 “도발 중단하라”(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영유권 국제중재 판결의 준수를 촉구한 미국 정부를 향해 강한 불만과 반대 입장을 나타냄.
- 중국 외교부는 12일자로 루강(陸慷)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남중국해 국제중재 판결에 관한 성명에 대해 “미국의 성명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무효한 중재판결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 정신에 맞지 않고 ‘영토 분쟁에서 한쪽을 들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 루 대변인은 “미국은 스스로의 언행을 반성하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도발과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중단하라”며 중국의 주권·안보이익을 훼손하고 지역 정세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언행을 중단할 것도 요구함.

#### ■ ‘남중국해 판결’ 美전문가들, 강제력 약하나 中에 상당한 압력(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비록 강제력이 미약하지만, 중국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진단함.
- 또 미국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항행의 자유’ 군사 작전을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미중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함.
- MIT 프레블 교수는 “앞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더욱 공격적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중재판결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의 (대미) 시각은 더욱 적대적이 될 것”이라고 말함.

#### ■ 美언론, 中이 국제심판 받은 건 처음·굴욕 분노 美향하나(연합뉴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다룬 국제분쟁중재기구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12일(현지시간) 중국의 ‘완패’로 결론 나자 미국 언론들은 굴욕감을 맛본 중국의 분노가 미국을

- 향할 것이라고 분석함. 중국의 판결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일제히 전망함.
-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패권국 중국이 작은 나라 필리핀에 완전히 패배했다”며 “중국이 가장 두려워한 굴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함.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부가 국제적인 사법 심판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이 자국에 불리한 판결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고 보도함. 워싱턴포스트(WP)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이거나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계기로 “남중국해 긴장과 대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함.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번 판결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압박하는 기회를 잡았다”면서 “중국과의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질 위험성도 커졌다”고 전망.

#### ■ 남중국해 판결 이후 미·중 군사력 대치 첨예(연합뉴스)

-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다고 사실상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남중국해상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력 대치가 첨예해질 전망이다.
- 판결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 영토”라면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함께 단호한 수호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을 통해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혔.
- 베트남 문제 전문가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의 칼라일 테이어 명예교수는 미 해군연구소(USNI) 뉴스와의 회견에서 베트남이 쾌속 호위함과 유도미사일 프리깃함에서부터 지상 발사 및 함정 발사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사력을 증강하는 점을 지적함. 테이어 교수는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즉각 응사할 태세를 갖춘 분쟁 당사국이 베트남”이라며, 미국이 베트남을 통한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봄.

2016. 7. 14.

#### ■ 백악관 “국제법규 지켜야..남중국해 해로 보호” 中 재차 압박(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 국제법규를 지키라고 재차 압박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중재 판결은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아니스트 대변인은 “각국이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는 국제적인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호 연결된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려면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 것”이라고 말함.
-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PCA 중재 판결 직후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면서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 성김 “필리핀, 남중국해 자국 해역 더 잘 감시하도록 지원”(연합뉴스)

-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내정자는 13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과의 긴밀한 협력 방침을 밝힘. 김 내정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 서면증언을 통해 주필리핀 대사로서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함.
- 김 내정자는 “필리핀 대사로 인준된다면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지금처럼) 강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새 대통령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남중국해 긴장완화를 위한 필리핀의 노력을 지원하고, 또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 연안의 자국 해역을 더 잘 감시하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말함.
- 김 내정자의 언급은 직접적 이해 당사국인 필리핀과 공조해 남중국해 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 남중국해 갈등 ‘속도조절’…美 아세안, ‘물밑’ 중재 나섰다(연합뉴스)

- 남중국해 국제판결 직후 이해 당사국의 갈등이 수면 위로 터져 나왔지만 미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이 물밑에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관측이 나옴. 실제 소송 당사국인 중국과 필리핀도 원칙적인 반응 이외에는 발언 수위를 조절하며 협상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음.
- 교도통신은 14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PCA의 판결과 관련한 아세안 10개국의 공동성명 발표가 무산됐다고 전함. 초 중국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려는 설명을 내놓으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캄보디아 등 일부 친중 국가의 반대로 공동성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일각에선 남중국해에서 극한 대립을 우려한 미국이 남중국해 판결을 중국을 향한 공격적인 카드로 활용하지 않도록 우방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을 설득했다는 관측도 흘러나옴.
-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남중국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에 착수했다”고 보도함.

## 나. 미·일 관계

### ■ 특이사항 없음

## 다. 미·러 관계

2016. 7. 9.

### ■ 美, 러 외교관 2명 추방...미 외교관-러 경찰 몸싸움 대응 조치(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자국 외교관과 러시아 경찰관이 벌인 몸싸움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했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함.
-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외교관 추방과 관련한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 6일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러시아 경찰관이 미국 외교관을 공격한 것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는 행동이고, 우리 외교관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말함.

2016. 7. 10.

### ■ 美, 러, 외교관 맞추방...‘외교관-경찰관’ 몸싸움 이후 신경전(연합뉴스)

-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미 외교관과 러시아 경찰관이 몸싸움을 벌인 것을 두고 양국이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9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2명을 추방했다면서 이는 미국이 전날 자국 외교관을 추방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힘.
- 라브코프 차관은 추방된 외교관 2명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이며, 이들 중 1명이 지난달 러시아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당사자라고 주장함.

2016. 7. 14.

### ■ 외교관 추방 신경전 속 러시아, 미국 방송위원장 입국불허(연합뉴스)

- 미국의 해외방송을 감독하는 방송위원회(BBG) 위원장이 러시아에 입국하려다가 거부됨. BGG는 13일(현지시간) 제프 셸 위원장이 전날 모스크바 국제공항에서 입국절차를 밟던 중 공항 관리들에 의해 빈 방으로 안내돼 3시간 정도 갇혀 있었다고 밝힘.
- 미국 여권과 러시아 비자를 갖고 있었지만 셸 위원장은 러시아 입국이 거부됐고, 몇 시간 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비행기를 타야 했음.
- 미국과 러시아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음. 최근 러시아와 미국은 상대국 외교관을 서로 추방하면서 신경전을 벌인 바 있음.

■ **러, 미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세 주사·관련국과 협의 준비(연합뉴스)**

- 러시아가 미국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및 배치 장소 선정과 관련한 러시아 측의 입장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함.
- 모스크바 주재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특파원은 이날 러시아 외무부 정례 브리핑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질문함.

2016. 7. 15.

■ **美 러, 시리아서 IS격퇴 군사협력 모색·백악관, 확실한것 아냐(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가 수니파 무장반군 '이슬람국가(IS) 격퇴 및 시리아 평화협상 성사를 위해 시리아에서 손을 잡기로 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WP가 입수한 8쪽짜리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이 러시아에 IS 격퇴를 위한 공동작전을 제안한 것으로 돼 있음. 문건은 양국의 IS 목표물 공동 폭격작전, 공동 지휘사령부 운영, 기타 통합 작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양국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동유럽 지역에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6일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입구에서 벌어진 미국 외교관 1명과 러시아 경찰관 1명의 몸싸움 사건을 계기로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푸틴, 방러 케리와 면담·시리아·우크라 문제 등 논의(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크렘린궁에서 접견하고 면담함.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파리에서 모스크바로 날아온 케리 장관은 밤 10시께 크렘린궁을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남.
- 면담에 세르게이 리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배석함. 푸틴과 케리 장관은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 등 국제 현안과 양자 관계에 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짐.
- 푸틴 대통령은 케리 장관과의 면담을 시작하면서 “(지난 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요 현안들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양국의 진실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미국 국무장관의 방러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힘.
- 이에 케리 장관도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의 이익을 위해 아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측과의 이번 협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화답함.

## 라. 중·일 관계

2016. 7. 11.

### ■ 中, 日 선거결과에 ‘촉각’...전쟁에 한걸음 더 다가서(연합뉴스)

- 중국이 일본의 연립여당이 7·10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데 대해 경계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일본 정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중국 관영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런 중국 측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음.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1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도하면서 “개헌의 문턱을 넘어 전쟁 개시를 향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는 제목을 달았음.
- 관영 신화통신도 전날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를 사실관계 위주로 보도하면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대해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함.

### ■ 中, 日 선거결과에 “역사 교훈 새겨 평화의 길 걸어야”(연합뉴스)

- 중국이 일본의 연립여당이 7·10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데 대해 경계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일본 정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새기고 아시아국가와 국제사회의 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중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루 대변인은 “일본은 역사적 문제, 아시아인에게 저지른 엄청난 죄행이 있으므로 오늘날 일본의 아시아 안보영역에서의 정치 동향은 아시아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강조함.
- 관영 신화통신도 전날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를 사실관계 위주로 보도하면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대해 갈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함.

2016. 7. 12.

### ■ 日외무상,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단 구속력 있다(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2일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재판소의 판단은 분쟁 당사국 간에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법에 근거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제적인 법질서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필리핀의 중재재판 활용을 지지한다”

며 이같이 말함.

- 이런 발언은 중국 측이 PCA 판결이 불리하게 나올 경우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기사다 외무상은 “법의 지배를 관철시키는데 관계국과 협력해 나가는 동시에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임.

#### ■ 요미우리, 아셴 활용해 몽골서 중일 정상회담 추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활용해 중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 신문이 12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ASEM 참석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정상회담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
- 일본 정부는 최근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중국 군함이 반복해 접근해 양국 간 긴장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일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임. 아베 총리와 리 총리는 작년 11월 서울에서 회담했으며 보도대로라면 7개월여 만에 다시 정식으로 회담하게 됨.

2016. 7. 13.

#### ■ 정당한 사법절차 결과…日언론, 남중국해 판결수용 촉구(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척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중국이 수용해야한다고 13일 일제히 촉구함.
- 일본은 중동에서 원유 등을 수입하는 수송로로 남중국해를 활용하고 중국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영유권 분쟁 중임.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PCA 판결을 중국의 해양 진출에 제동을 거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수세에 올린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그 영향으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 中, 일본의 남중국해 판결 옹호에 ‘침략국’ 비난(연합뉴스)

- 중국은 일본이 ‘남중국해 중재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일본의 침략역사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함.
- 1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밤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경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2차 대전 시기 중국의 남해(남중국해) 도서를 침략해 점령했다”고 말함. 이어 “중국은 이후 (남중국해 도서를) 회수했다.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확립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협정’ 등의 국제문건은 이를 명확히 규정했다”며 “일본은 마땅히 전후 국제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임.

- 또 일본을 향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루 대변인은 “아나이 슌지는 (ITLOS 소장을 맡는) 동시에 아베 신조(安倍晋三:현 일본총리)의 안보법제 간담회 회장을 맡아 집단자위권 해제를 지원하며 전후 국제질서의 통제에 도전했던” 인물이라며 “이는 중재법정이 성립 초기부터 정치화됐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2016. 7. 14.

■ **日집권당, 우리도 중국 제소하자·동중국해 가스전 시비(연합뉴스)**

- 남중국해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에 중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중국을 제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동중국해 자원개발에 관한 위원회’는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PCA에 중재재판을 신청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굳힘.
-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자민당 동중국해 자원개발에 관한 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외무성과 법무성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이런 방침을 정했으며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제출할 계획임.
-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중재재판보다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임.

**마. 중·러 관계**

2016. 7. 10.

■ **중·러, 사드 대응한 컴퓨터 군사훈련 첫 실시(연합뉴스)**

- 한미 양국의 한반도 ‘사드’(THAAD·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반(反)사드 연합훈련을 했다는 관측이 나옴.
-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9일 홍콩 봉황(鳳凰)위성TV 프로그램에 출연 “중러가 최근 컴퓨터 미사일방어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는 사드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함.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베이징(北京)



에서 회동한 뒤 미국의 글로벌MD(미사일방어) 전략을 맹비난하는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시드 베치는 자신들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함.

##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Ⅲ 북한인권

##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북한인권 국제동향	7.9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오헤아 키타나 최종확정(미국의소리)
	7.11	국제 엠네스티, 탈북 식당 종업원 관련 정보 공개해야(자유아시아방송)
		몽골의 北노동자, 3만원 벌어도 2만원 상납해야(연합뉴스)
	7.12	미KCC, 미 의원들에 '북 인권 개선' 역할 촉구(자유아시아방송)
7.13	北 체제비판 영화 '더 월', 최고 인권영화상 수상(연합뉴스)	
	캐나다, 탈북자에 첫 '인도주의 영주권' 부여(자유아시아방송)	
	미국 한인 2세 학생들, 백악관 앞에서 북한인권 개선 촉구(미국의소리) 미 의원들, 김정은과 측근들 배척하고 주민들 해방시킬 것(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7.12	북한, 억류 미국인 2명 전시범 따라 처리(미국의소리)
		북, 사법기관 인권유린에 뒤늦게 단속 나서(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남한동향	7.10	정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키타나 임명에 환영(연합뉴스)
	7.11	작년 탈북민 80% 여성...女인권 보호 정착 대책 필요(연합뉴스)
		탈북단체협의회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가족 생사확인" 촉구(연합뉴스)
7.12	민변, 北식당 종업원 관련 인권위에 진정(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7.13	日 민간 납치피해단체, 몽골서 대북 중파 라디오 방송(연합뉴스)
대북지원	7.12	미 의회 국무·국방 세출법안 '대북 원조 금지' 명시 (미국의소리)
		유니세프, 북 장마철 재난 대비 계획(연합뉴스)
	7.14	EU, 대북 재난 사업에 30만 달러(자유아시아방송)
	7.15	네덜란드 연구팀, 北해외노동 불법착취 기업 제소추진(연합뉴스)

## ■ 주간 동향

###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7. 9.

####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오헤아 키타나 최종확정(미국의소리)

-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아르헨티나 출신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전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을 최종 확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최경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8일 속개한 특별회의에서 "법률사무국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지난 1일 내린 결정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새로운 인물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유엔 회원국들과 더욱 폭넓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 출신인 오헤아 키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일하면서 미얀마 인권 상황 개선에 힘을 쏟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오헤아 키타나는 지원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할 기회는 도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서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일하면서 미얀마가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전환하는 것을 목격했고,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지원한 것도 그 같은 희망에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음.

2016. 7. 11.

#### ■ 국제 엠네스티, 탈북 식당 종업원 관련 정보 공개해야(자유아시아방송)

- 한국 정부가 지난 4월 중국 닝보의 북한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 13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인권 단체 국제 엠네스티(AI)가 주장함. 국제 엠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추측과 주장들이 많지만,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이 단체는 이어 수개월 동안 이 종업원들은 그 가족들 또는 그들이 선택한 변호사들과의 접촉이 거부 되어 왔다면서,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설명함. 따라서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개인들에게 북한에 있는 그들의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이 선택한 법적 조안을 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함.

- 한국 정부 당국자는 “국정원이 북한의 선전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 몽골의 北노동자, 3만원 벌어도 2만원 상납해야(연합뉴스)

- 외화벌이 일꾼으로 몽골에 파견된 북한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된 노동은 물론 임금 상납에다 체불의 고통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음.
- 보수는 하루에 작업면적 1㎡당 몽골화폐로 5천 투그릭(약 2천8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함. 일감에 따라 적으면 하루에 5만 투그릭(약 2만8천원), 많으면 10만 투그릭 이상도 벌지만, 인력 송출회사에 4만 투그릭(2만2천원)을 상납해야 하므로 일이 적을 때는 본인들은 고생만 하고 정작 돈은 못 버는 구조라고 함.
-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이들과처럼 몽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몽골에만 2천 명 정도이며 대부분 수도 울란바토르에 집중돼 있음.
- 건설 노동자들이 1천500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봉제공장 여공(100명 이상), 식당종업원 등 서비스업(40~50명), 탄광 광부(50여명), 의사, 태권도 전공 교수 등 소수의 특수직군도 있다고 함. 이 센터는 최근 발간한 자료집에서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건설현장에서 인건비만 1억8천만 투그릭(약 1억 원)이 체불됐다”, “(개인적으로) 3천만 투그릭(약 1천 700만원)을 못 받았다”, “제일 힘든 것이 노임을 못 받는 것”이란 등의 증언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도 몽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인권실태에 우려를 나타내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국무부의 북한 인권제재가 발표된 7일 몽골에서 일하는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음.

2016. 7. 12.

#### ■ 미KCC, 미 의원들에 ‘북 인권 개선’ 역할 촉구(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KCC)’이 12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미국 의원들을 방문하고 북한 인권을 위한 미국 주류 사회의 역할을 촉구함. 이 단체가 올해로 7번째 개최하는 연례 북한인권 행사의 일환임.
-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대변한다는 의미의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세요(Be Their Voice for Our Brothers, Sisters and Orphans in North Korea)’임. 주요 행사로는 12일 백악관 앞에서의 촛불기도회와 행진, 이어 13일에는 미국 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미국 의원들을 초대해 열리는 대규모 집회 등이 있음.

- 올해 행사에서는 장애인으로 목발에 의지한 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지성호 나우(NAUH) 대표가 초대돼 증언할 예정이다.
- 교회연합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탈북고아입양법'과 '대북제재이행법' 등의 통과를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지한 바 있음.

## 2016. 7. 13.

### ■ 北 체제비판 영화 '더 월', 최고 인권영화상 수상(연합뉴스)

-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영화 '더 월(The Wall)'이 지난 5~10일 아일랜드에서 열린 '제28회 갠웨이 필름 플라'에서 최고 인권영화상을 받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이 상은 영화제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것임.
- 이 영화 연출자 데이비드 킨셀라 감독은 “누군가 정해진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개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에 대한 영화”라고 소개함. 킨셀라 감독은 애초 북한의 젊은 여류시인에 대한 기록영화를 만들려고 했으나, 북한에 도착한 직후 시인을 비롯해 그 가족과 이웃이 모두 연기자라는 사실을 알게 됨.
- 그는 북한당국의 협조 아래 촬영을 마친 뒤 2년간의 편집을 통해 애초 자신과 북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영화를 만들었다고 VOA는 설명함.

### ■ 캐나다, 탈북자에 첫 '인도주의 영주권' 부여(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이민·난민국이 인도주의 이민을 신청한 탈북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김성호·박은숙(가명) 부부에게 영주권을 부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RFA는 “이들이 처음에 난민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고, 인도주의 정상참작 프로그램을 신청한 지 1년 6개월 만에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서 “인도주의 정상참작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례는 이례적으로, 캐나다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한 탈북민들 가운데 첫 사례”라고 밝힘.
- 인도주의 정상참작 프로그램은 이민이나 난민과는 별개이며, 캐나다 정부가 유아·여성·노인·가정폭력·동성애·종교·정치적 박해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고 RFA는 설명함. 인도주의 정상참작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확률은 30% 정도 된다고 한함.
- 현재 캐나다에 사는 탈북자들은 약 300명으로, 캐나다 정부는 지난 2년 연속 1~2명의 탈북자에게만 난민 지위를 부여함.

### ■ 미국 한인 2세 학생들, 백악관 앞에서 북한인권 개선 촉구(미국의소리)

- 미국 백악관 앞 리퍼에트 공원에서 12일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림. 이날 집회는 미국 내 한인 기독교단체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가 한인 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름 인턴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 이날 집회에서 미국 각지에서 온 한인 2세 학생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을 고발함. 학생들은 중국에서 강제북송의 위협 등 인권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탈북 난민들과, 중국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해 고통 받는 탈북 고아 2만 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학생들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제재이행법과 북한인권법, 북한고아입양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이번 행사에 특별연사로 초청된 서울의 북한인권 청년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함.
- 지난 2004년 발족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는 2010년 이후 매년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7번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행사 이틀째인 13일에는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초청해 연설을 듣고, 북한인권 회복을 외칠 계획임.

#### ■ 미 의원들, 김정은과 측근들 배척하고 주민들 해방시킬 것(연합뉴스)

- 13일 미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림.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한인교회연합 KCC'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미 하원의원들이 참석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
-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연설을 통해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 미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근거가 됐다고 말함.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근거로 김정은과 핵심 측근들을 직접 제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들을 배척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임.
- 로이스 위원장은 'VOA'에, 현재 미 의회에서 방송을 통해 북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면서 정보를 유입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안팎에서 벌어지는 진실을 알리면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함.

##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7. 12.

#### ■ 북한, 억류 미국인 2명 전시법 따라 처리(미국의소리)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한 당국이 지난 10일 뉴욕의 대표부를 통해 앞으로 미-북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함. 아울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정부에 통보했다고 전함.

-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나온 것임.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데릭 워비아 씨 등 2 명임.

#### ■ 북, 사법기관 인권유린에 뒤늦게 단속 나서(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법규위반자 단속과정에서 지나친 폭력을 삼기려는 지시를 사법기관들에 비공개적으로 내렸다”는 소식임. 지난 해 유엔 서울인권사무소가 설치되던 이어 이달 초 미국정부가 북한인권 제재대상자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한 결과 이런 조치가 나온 것 같다고 소식통들은 풀이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9일 “예전에는 당연하게 행해졌던 보안원들의 폭행에 제동이 걸린셈”이라며 “최근 주민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골적인 인권유린행위를 삼기려는 중앙의 지시가 사법기관들에 비밀리에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최근 양강도 신파군 보안서 국경감찰과 보안원의 인권유린행위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다”며 “김철이란 이름의 이 보안원은 미약필수와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으로 추방됐다가 최근 신파군 보안서에 복직됐다”고 전함.
- 이와 관련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11일 “627 국경감찰과 실장 리승혁(32세)의 죄행은 신파군 보안서 김철을 능가한다”며 “627은 작년 6월 27일 미약범죄 단속을 강화할 데 대한 김정은의 지시로 12월에 신설된 부서”라고 언급함. “리승혁은 보천군 보안서장의 아들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교화소에서 갓 퇴소한 주민들을 탈북을 시도한 것처럼 꾸며 현장에서 체포하는 악랄한 보안원으로 지역에 알려졌다”고 말함.
- 소식통은 또 “비단 리승혁이나 김철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북한 사법기관원의 인권유린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느낀 당국이 갑자기 주민들의 인권유린 행위 자제지시를 내렸지만 과연 이게 일선 사법기관원들에 먹혀들겠느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함.

###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7. 10.

#### ■ 정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키타나 임명에 환영(연합뉴스)

- 정부는 10일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전(前)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것을 환영함.
-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지난 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키타나 전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이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보관 후임

으로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임기는 최장 6년까지 연임할 수 있음.

2016. 7. 11.

#### ■ 작년 탈북민 80% 여성…女인권 보호 정착 대책 필요(연합뉴스)

- 북한 이탈 주민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고려해 그에 걸맞은 성(性)인지적 정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남녀 간 성의 특성을 고려해 북한 이탈 주민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임.
- 11일 오후 충북여성정책포럼 주최로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충북도 북한 이탈 여성정책의 발전 방향’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화순 한신대 유라시아 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탈북 여성 인권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권수에 충북여성정책포럼 대표는 “북한 이탈 여성의 인권 보호와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성인지적 지원 정책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 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의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힘.

#### ■ 탈북단체협의회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가족 생사확인” 촉구(연합뉴스)

- 자유통일 탈북단체협의회는 11일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된 탈북자 가족의 편지를 북한 당국에 전달하라고 촉구함.
- 통일미래연대와 자유 북한네트워크, NK위치 등 7개 탈북단체로 이뤄진 자유통일 탈북단체협의회는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측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수용자 생사 확인 내용을 담은 13명 탈북자 가족의 편지를 북한 당국에 전달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고 밝힘.
- 이와 관련, 이 단체의 최현준 회장은 “NCCK는 지난 6월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한 호텔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관련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두 차례 회담을 진행했다”면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가족에게 보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편지를 북한 독재정권에 전달하고 그들의 생명과 인권, 자유 보장을 북한 독재정권에 정식 요청해야 한다”고 말함.
-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일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강제 수감된 가족 20명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위임장도 제출한 바 있음.



2016. 7. 12.

■ **민변, 北식당 종업원 관련 인권위에 진정(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2일 “중국 내 식당을 탈출해 집단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의 보호시설 수용이 적법한지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
- 민변은 진정서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인신 구제 청구를 통한 종업원들의 구제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인권위가 직접 나서 북한이탈주민센터 내 장기 수용이 적법한지 조사해달라”고 주장함.
-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의 인신 구제를 법원에 청구했다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에 계류 중임.

####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7. 13.

■ **日 민간 납치피해단체, 몽골서 대북 중파 라디오 방송(연합뉴스)**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사하는 민간단체 '특정실종자문제조사회가 오는 29일부터 몽골의 방송 시설을 통해 대북 중파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전함. 신문에 따르면 조사회는 현재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인 '시오카제(바닷바람이라는 뜻)'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에 보급된 약 300만대의 라디오 가운데 3분의 2가 중파 수신기여서 종전 단파 방송 이외에 중파 방송을 추가로 하기로 함. 당초 조사회는 시오카제처럼 일본에서 대북 중파 방송을 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시설 허가가 쉽지 않아 몽골의 방송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바꿈.
- 대북 중파 방송은 매일 밤 11시 반부터 30분간 한국어와 일본어로 할 예정임. 북한 관련 뉴스 이외에 납치 피해자 이름도 일일이 호명하게 됨.

#### 5. 대북지원

2016. 7. 12.

■ **미 의회 국무·국방 세출법안 '대북 원조 금지' 명시 (미국의소리)**

-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국방부와 국무부의 2017 회계연도 세출법안에 북한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명시됨. 지난달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상원 전체회의에서 곧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7 국방세출법안' (H.R. 5293)은 “책정된 예산 중 어떤

- 자금이 북한 지원을 위해 지출되지 못한다”는 조항을 포함함.
- 지난달 29일 상원에 발의된 ‘2017 회계연도 국무대의 운영 세출법안(S.3117)도 “경제지원기금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쓸 수 없다”고 명시함.
  - 상원 세출위원회는 국무부 세출법안을 동반하도록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인 행동과 핵무기 개발이 우려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협조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힘.
  - ‘2017 회계연도 국무대의 운영 세출법안’은 북한에 대한 `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방송 시간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북한 난민들을 지원하도록 함.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책정하도록 했고, 한국계 미국인들과 북한 친지 상봉과 관련한 협회에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함.
  - 또 국무장관이 2004 북한인권법에 따라 의회에 매년 제출하게 돼 있는 보고서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관한 협의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함.

#### ■ 유니세프, 북 장마철 재난 대비 계획(연합뉴스)

- 유엔아동기금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주민 10만 명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응급 구호 세트를 마련해 놓았다면서 올 여름 재난 대비 계획을 소개함.
- 또 영양 지원으로는 주로 급성 영양실조 상태인 북한 어린이가 먹을 수 있는 즉석 가공 식품 5천명 분을 이미 북한에 두었다고 이 기금은 설명함.
- 유엔아동기금은 또 6개월에서 60개월 사이 북한 어린이를 위한 비타민 A와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약 5만 명분을 지원하며, 그리고 5만 명의 수유모에게 미량 영양소를 제공할 계획임. 또, 이 기금은 매년 북한 홍수 발생 시 문제가 되는 식수, 위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10만 가구가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질 정화제 320만 정을 준비했으며, 정수기도 학교, 보건 시설 등에 비치해 둬.
- 또, 유엔아동기금은 홍수 시 설사병 급증에 대비해 경구용 수분 보충 소금, 물 저장 용기 등을 지원하고 있음. 교육 분야에서도 유엔아동기금은 중등학교 학생들이 학습 자료, 방과 후 활동 교육 자료,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비상 방수포도 준비해 놓음.

2016. 7. 14.

#### ■ EU, 대북 재난 사업에 30만 달러(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천 200 만 달러를 배정했다면서, 이 중 북한 지원에는 약 30만 유로, 즉 미화 34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힘. 유럽연합은 이번 대북 재난 지원 사업은 핀란드 적십자사가 이행한다고 설명함.
- 유럽연합의 대변인실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업의 중점 사안은 북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지를 알도록 미리 기술과 지식을 쌓는 데 있다고 설명함. 또, 핀란드 적십자사가 조선 적십자사 관계자와 지역 재난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 훈련 등도 맡고 있다고 설명함.
- 홍수나 가뭄 등 재난이 닥쳤을 때는 임시 거처인 천막, 응급 용품, 위생 용품 등을 지원할 예정임. 또 유럽연합은 가뭄 방지를 위해 관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며 조기 경보 및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임.

## 2016. 7. 15.

### ■ 네덜란드 연구팀, 北해외노동 불법착취 기업 제소추진(연합뉴스)

-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네덜란드 라이덴대 아시아센터 연구팀은 노동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용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연구팀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일한 임커 관 할딩엔(44) 국제/유럽연합(EU) 노동법 전문가는 연합뉴스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힘.
- 이에 앞서 연구팀은 지난 6일 「EU 내 북한인 강제노동, 폴란드 사례」 라는 제목 아래 115쪽 분량의 영문 보고서를 내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노동을 통한 외화벌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법적 노동에 의한 자금 유입 차단을 촉구한 바 있음.